北사찰 복원 · 지원 재개 '준비 만반'

신년 남북불교교류 전망은

남북관계 훈풍 전망 속
불교 대북교류 계획 수립
남북 공동행사 · 개최 주력
"범종교계 접근 관심 높아"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올해도 남북관계 훈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준비한 새 대북사업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간 단절됐던 남북 민간교류 및 인도적 지원활동이 실효성을 갖춰 현실화될 전망이 나온다.

사찰조사 · 템플스테이 준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주요 종단들은 북한 문화재 복원 및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사업 추진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수차례 천명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방점을 찍고 북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은 "종단 관심사업인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 협의를 거쳐 템플스테이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 북한 답사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민추본과 사회부, 문화부가 협업해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민추본 주요사업은 △신계사 건축물 공동 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대표단 서울-평양 상호교차방문 △만해선사 남북합동다례재 △금강산 신계사 시범 템플스테이 △북한 사찰 산림조성 협력사업 △통일대비 북한 불교정책 로드맵 보고서 발간 등이다.

또한 민추본은 신계사를 비롯,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총본산인 평안남도 법흥사 등 의미 있는 폐사지 발굴 등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북제재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사찰 문화교류를 우선 사업으로 북측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주관한 남북공동행사에 참여, 방북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스님은 북한 금강산서 열릴 새해맞이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에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불교 대표로 참가한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2005년 복원한 개성 영통사를 중심으로 사찰 현황조사 · 보수 및 문화교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은 "2005년 10월 복원 당시 건축마감재를 전달한 뒤로 조사 ·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영통사 중창불사를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중국 심양서 조불련 측과 만나 중창불사, 개성 성지순례 및 영통사 템플스테이 등에 대한 뜻을 전달해 상호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북한불교계와 개별적인 연락을 이어오며 금강산 유점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태고종에 따르면, 금강산 유점사는 현재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법륜사의 본사다. 종단을 대표하는 불이성 법륜사는 유점사의 서울 포교당이며, 대륜선사가 개원한 유점사의 맥을 잇는 문중임을 되새기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종단 측 설명이다.

올해 태고종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점사 복원 사업을 위해 기존 유관기구인 금강불이회를 보완하고, 예산 등 실제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태고종 사회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과 총무원장 스님이 심양서 만나 유점사 관련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북한 불교계 연락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 지원기구 '시동'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사)JTS(이사장 법륜) 역시 얼어붙은 남북 정세로 인해 중단됐던 북한 지원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다수의 대북지원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된 것과 달리, JTS는 함경북도 등 열악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북한 수해지역 긴급구호를 위한 밀가루 500t 지원을 끝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JTS는 지연된 북한지원 사업으로 인해 지정후원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지 않고, 대북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정영미 JTS 사무국장은 "기존 53개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즉시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불교계가 남북교류 본격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민간교류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북측에 지속 제안한다면 불교계가 다양한 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누며하나되기 관계자는 "종단의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범종단, 범종교계 차원의 대북사업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와 캠페인 등을 함께 준비한다면 민간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방북, 공동행사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천태종
영통사 현황조사 · 중창
개성지역 성지순례 추진

태고종
유점사 역사 및 전통 복원
전담기구 보완, 예산 준비

JTS
함경북도 등 식량지원
53개 지원시설 회복 목표

봉축표어 공모 시작

1월 20일까지, 글자수 10자 내외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표어 공모가 시작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오는 1월 20일까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사용될 표어를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모든 이다. 표어는 글자수 10자 내외로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겨 존경받는 불교로서 미래지향적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1인 최대 1개씩 응모가능하며 추가분은 무효처리된다. 또한 타인 명의 응모는 금지된다.

표어 공모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ang@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대상 1인에게 50만원, 장려상 3~10인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02)2011-1745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새해 달라지는 문화재 행정들

올해부터 소규모 발굴조사에서도 연면적과 상관없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산문화재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처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 이하 ·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현행 조항이 유지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 연면적 상관없이
소규모 발굴 국가 지원
동산문화재 관리 체계화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해야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 · 조각 · 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침의 적용 대상을 동산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보존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유산 3D데이터 무료 사용하세요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털서 3D프린팅 데이터 개방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3차원 입체(3D)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가 훼손 · 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1월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3D 데이터로 제작된 국보 제100호 개성남계원지칠층석탑.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 · 변환한 자료들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 ·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개성남계원지칠층석탑(국보 제100호),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하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 · 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방문하면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100MB 이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csjsh@korea.kr)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